

청춘들이 길 가다 떠났다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건사고로 되돌아 본 광주·전남 2022

3 이태원 헬리윈 참사

10월 29일 좁은 골목길 인파 몰리며 광주·전남 출신 10명 등 158명 압사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제대로 안돼 CPR 등 생존율 높이는 법 관심 집중

“일부러 더 바쁘게 밤낮으로 닦치는대로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만히 계시면 자꾸 생각이 날테니...”

이태원 헬리윈 참사'로 딸 오모(여·24)씨를 잃은 유족의 근황을 유족의 친척이 조심스레 전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다가오지만 유족들의 슬픔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모호하다는 것이 유족들의 호소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헬리윈을 즐기러 모인 수많은 인파가 넘어지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온통 슬픔에 잠겼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10명의 광주·전남 출신 지역민이 이태원에서 젊은 생을 마감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90년대생으로 자신들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했다.

희생자들의 장례식장에서 부모들은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떠난 아들·딸들에게 “어떻게 나를 장례식장으로 부를 수 있니?”라며 오열했다.

타 지역에서 간호사의 꿈을 키우며 “이제는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던 딸, 취업 기쁨으로 친구들과 이태원을 찾았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아들, 백화점에 갔 취업해 서울 생활을 하던 딸 등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졌다.

광주·전남에서는 지자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나눴다.

광주시청, 5·18민주광장 등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3000명이 넘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역민들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길 기도합니다”, “친구야,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자” 등의 추모글을 남겼다.

국가예도기간이 끝나면서 광주·전남 합동분향소가 철거되도, 시민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온라인 추모공간에서 애도의 목소리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CPR(심폐소생술) 영상이 퍼지면서 관련기관에 감습 문의가 빗발치고 CPR을 하며 함께 사용하면 생존확률이 높아지는 AED(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관리하는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유족들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진상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시작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진행중이지만 유족들의 울분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한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발해 국민의힘 소속 국정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성역없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촉구하면서 아직도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그동안 세월호 등 대형참사를 겪었지만 교훈을 삼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유족들의 입장에서 모 든 것을 바라봐야 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국민들도 2차 가해를 하는 왜곡을 해서 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무등산 야영장 개발 대신 습지 확대해야”

〈속보〉국립공원 무등산지킴이시민연대는 22일 무등산국립공원에 야영장을 추진(광주일보 2022년 12월 22일자 7면)하는 것과 관련 “화암야영장 개발이 아닌 평두메 습지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야영장 예정지 인근 평두메 습지는 삼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중요 습지다”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영장 개발이 아닌 특별보호

지역을 확대해 무등산국립공원의 생물다양성 회복 및 생태적 가치 확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호사 집단시설지구도 광주호 인근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자박이 가능한 대규모 야영장을 충민사 뒤편에 추진하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면서 “화암야영장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백지화하고 평두메습지 특별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2023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이 2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단편소설부문 백종익씨, 동화부문 한유진씨, 광주일보 정후식 논설실장, 시 부문 오후랑씨.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인작가 등용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단편소설·시·동화 3부문

202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22일 오후 4시 3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 4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눈이 내리는 등 늦은 날씨에도 수상자와 가족, 광일신문학회 회원, 문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백종익(61)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오후랑

(42)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한유진(49)씨에게 상패와 상금 각각 100만 원이 수여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정후식 논설실장 겸 이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창간 이듬해부터 진행해 온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선자의 결실을 이룬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일보는 신문과 문화전문매거진 월간 ‘예향’을 통해 신진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비롯해 책 발간 소식 등을 보도해왔다”며 “앞으로

도 신춘문예 외에 호남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는 모두 1856편이 투고됐다. 시 1552편, 소설 166편, 동화 138편으로 예년 수준의 응모 현황을 보였다. 이번 신춘문예에서는 약화된 경제상황을 그린 작품들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단절된 인간관계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다수 응모됐다. 지속된 경제난이 글쓰기의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 고교 8곳, 내신 1등급 없는 이유는?

최소 학생수 정원 13명 미달...대입전형 불리

전남지역 8개 고교는 ‘내신 1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으로 내신 1등급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 학생 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내신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고교 서열화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3 학생 수가 13명에 미치지 못해 1등급을 1명도 내지 못하는 학교는 43개교에 달했다.

강원은 12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0개교, 전남 8개교, 경남 5개교, 경북 5개교, 인천 3개교 등이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1곳도 없었다.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238명)는 학교당 1등급이 10명에 달하는 데 비해 전남(106명)의 학교당 1등급 학생 수는 4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내신 1등급은 상위 4%에 해당한다.

내신 1등급이 1명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 수가 적어도 13명 이상이어야 한다. 13명의 4%는 0.52명으로 1명 미만이지만 현행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관리지침에서는 반올림한 값을 해당 내신 등급 구간의 누적인원으로 삼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취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지역, 고교 간 차별을 막고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전남 건설현장 229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광주·전남지역 396

곳의 건설현장 중 약 60%인 229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울머 지난달까지 광주와 전남 8개 시군(화순·곡성·구례·나주·담양·장성·영광·함평)에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54곳의 현장(74건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A건설의 공사현장 책임자와 법인을 입건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안전보건표지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210개소(391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중량물을 지지하는 짧은 기둥) 안전조치 미실시, 구축물 붕괴예방 조치 미흡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시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광주복지연구원이 함께 합니다

2022년 연구결과

- 1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실태조사
- 2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3 제5기(2023-2026)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 4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계획 수립
- 5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6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 7 광주광역시 장기요양등급자의 서비스 미이용 경험연구
- 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 9 광주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 10 수요공급 분석에 기반한 광주복지 재구조화 실행방안 연구
- 11 사회재난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12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 연구

2023년 연구과제 선정

- 1 제2차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 2 제5기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3 제4기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 4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방안(2024-2026)
- 5 광주광역시 고독사 실태조사
- 6 2023 광주복지 통계연감
- 7 루게릭 장애인 생애사 연구
- 8 광주다문화통합돌봄 서비스모형 개선방안 연구
- 9 장애인친화 영향평가 지표개발
- 10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방안 연구
- 11 광주복지협치 가이드라인 연구
- 12 광주광역시 노인빈곤가구 실태조사